

# 독일통일에 있어서 상이한 통일관과 과거청산<sup>1</sup>

## 허 창 운

이 연구는 독일의 재통일과정에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들을 이질적인 통일관에 입각해서 조명하고 특히 독일의 과거청산문제에 있어서 요청되는 분화된 역사상과 역사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제1장에서는 독일통일은 바로 비폭력의 미덕이 넣은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그 특수성을 지적한다. 그것은 독일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무혈혁명의 성공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독일의 재통일을 의문시하면서 그 역사적 의의를 과소평가하고 비판시하는 일련의 독일지식인들이 있음을 제2장은 지적한다. 그들은 통일을 자본주의/파시즘에 의한 '식민지화'로 해석하면서 못내 사회주의적 대안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개혁사회주의자로서 범주화된다. 하지만 독일의 통일은 결국 자본주의/파시즘의 승리가 아니고 자본주의/사회민주주의의 승리였다는 문제의 핵심이 있음을 제3장은 확인해준다. 끝으로 독일의 과거청산문제는 분화된 역사상을 구축하고 독일의 이중적 과거의 무거운 짐인 나치즘과 국가사회주의를 공산주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대조시킬 때 비로소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음을 제4장은 지적한다.

현재 통일독일이 안고 있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한다면 동·서독이라는 상이한 체제 하에서 추구된 사회적 가치<sup>2</sup>들의 위상을 동질성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재정립하고 나아가서 통합화 과정에서 분출되는 제반 불협화음들과 가치론적 역기능들을 최소화시키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시 '슈타지'에 기반하는 독재체제가 저지른 온갖 종류의 죄악들을 청산하는 문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는 사실이며, 따라서 진정한 통합작업은 예기치 않았던 수많은 장애에 부닥침으로써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예컨대 지난 92년 4월말에서 5월초에 걸쳐서 전후 40년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공공노조의 대규모 파업사태 등).

아무튼 독일의 근대사에서 최초로 민중의 저력에 의해 이룩된 이번의 '무혈혁명'이 과연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 우선 그 전말과 성격을 간략히 짚어본 연후에 이 통일의 역정에서 부가되고 있는 쟁점들의 맥락을 개관하고 상이한 통일관과 가치관 내지 역사관

1) 이 연구는 「분단국가의 통일과 이질화의 극복」이라는 공동연구의 일환으로서 독일통일을 보는 상이한 시각과 이에 따른 과거청산의 문제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작업이다. 특히 동·서독의 분단과 너불어 지난 40여년 간 독자적으로 구축된 상이한 체제의 이질화 현상들이 결국 서독 체제로의 흡수·통합에 따른 제반 갈등들과 맞물리면서 여하히 통화·극복되고 있는지를 본고는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은 궁극적으로 앞으로 우리에게도 다가설 통일의 '대사건'에 대한 준비자세를 가늠해 보는데 일종의 타산지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Kulturpolitisches Wörterbuch. Bundesrepublik Deutschland/DDR im Vergleich*(Hg.v. W.Langenbucher, R.Rytlewski u. B.Weyergraf), Stuttgart 1983, S.741f.참조.

에서 파생되는 여러 부작용들을 표본적으로 점검해 볼으로써 동질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과 그 해결전망을 기우해보는 순서로 우리의 고찰을 진행시키도록 한다.

## I. 독일통일 – 비폭력의 미덕이 놓은 산물

1989년 가을 동독의 데보내들이 품었던 유일한 희망은 단지 개인의 자유를 쟁취하는 일이었다고 말한다면, 이는 그 봉기의 의미를 너무 단순화시키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비폭력적 ‘혁명’은 결코 이데올로기에 뿌리를 두 것이 아니었음을 명백하다. 여러 가지 인자들과 요건들의 합주가 만들어낸 부હ혁명이 이루어진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것이 기존의 사회운동에 관한 제이론에 포함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데에 독일적인 특수성이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통일도 그러한 순항의 계속이 된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울까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이번의 독일 통일에 각별히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그 항거는 정치적 주동자에 의해서 사전에 조직되었거나 여하한 다른 방식에 의해서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sup>3</sup> 중들은 아무런 사전약속도 없이 특정시점에 한 특정장소에서 수십만이 운집하는 사건을 연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자발적인 협동의 한 고유모델’이라 부르기도 한다.<sup>3</sup> 이 설명모델에 의하면 누구든 생각하기를 모든 다른 사람들도 다같이 한 특정 장소에 올 것이라고 추정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현상에 대한 전제는 강력하고도 모두를 통일시키는 행동동인들이다. 이 동인들은 역시 1989년 동안에 강력하게 형성되었는데, 이는 정치적 항의에 대한 통상적인 사회학적 이론과는 달리 처음에는 교회의 한 지붕 아래에서만 집회를 열 수 있었던 재야단체들에서 대체로 분리되어 나온 것이다. 개인적이지만 결국엔 일반화되어버린 불만은 행동을 위한 가장 강력한 추동력이었으며, 그것은 특정재화의 결핍, 엄청난 환경파괴 및 철저히 배제된 시민권에 대한 요구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다.

이러한 동인들은 역시 외부로부터도 끊이지 않고 지원을 받았다. 그 중의 하나는 서방의 배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능해진 서독사정파의 비교를 통한 자생적인 지지였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련과 농구권에서 추진된 일반적인 민주화과정을 통한 부추김이 그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민주화과정이 당시의 동독에서 파급되는 것을 가속화시킬 것을 강력하게 희망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들도 사회주의통일당(SED) – 정권을 향해 개혁을 요구하는 서한들을 발송했는데, 그러한 권고들은 한결같이 묵살됨으로써 계속적으로 불만이 고조되는 결과를 낳고 만 것이다.

특히 1989년 후반부에는 이 불만이 명백히 팽창일로로 치달았다. 5월의 지방선거의 결과가 조작되었다는데 대한 일반적인 분노에 덧붙여서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sup>3</sup> Kulturchronik(1991, Nr.5), S.30f 참조.

을 허물기 시작한 사실이 전해지게 된다. 이로써 그 전에는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었던 항의형태인 ‘이주’가 당시에는 많은 동독인들에게 가능해졌던 것이다. 서방으로의 합법적인 이주신청이 그 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오랜 기간을 요했었고 또 기다리는 동안에 직장의 상실을 감수해야만 했다면, 이제는 단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범종이 실천에 옮겨진 셈이다. 1989년 여름 형거리를 거쳐서 이루어진 동독휴가사들의 도주 물결과 대대적으로 서독대사관으로 몰려온 동독인들의 쇄도로 인해 고향에 남았던 사람들은 동독정권의 철저한 대응조치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담성을 갖게 된 것이다. 자유를 찾아나서는 이 도끼는 당지도부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동독의 경제사정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또한 사회주의 통일당이 正道를 걷게 되는 일도 점점 더 개연성이 있을 것 같은 인상을 풍기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이런 것들이 1989년 10월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민의 불만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된 것이다. 누구나 이러한 불만은 인지된 정치적 영향력이 크면 틀 수록 또 억압에 대한 공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점점 더 강하게 작용하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금기야 1989년 9월25일 시위가 시작되기에 이르렀고 10월9일에는 위기의 시점에 도달하게 된다. 그 전 주만에 있었던 동독의 정부수립 40주년 기념축제에서는 정권의 요구와 일상생활 간의 불협화음이 백일하에 노출되었다. 이날 경찰의 개입이 없자 주민들은 결정적으로 폭력적인 억압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리하여 1989년 11월6일 시위자들의 숫자는 라이프치히에서만도 거의 50만에 육박하였다. 그 후로는 데모대들의 수가 점차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3일 후에 있었던 장벽의 개방과 더불어 최소한 항의의 이유 하나가 소멸하고 말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발적 협동모델’의 설명이 예로 들고 있는 것은 장벽이 허물어지던 날 저녁에 있었던 사건이다. 수천의 인파가 동일한 시간에 사전의 약속도 없이 동독에서 제일 먼저 출구가 뚫렸던 보른홀머街의 국경건널목에 모여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수십만의 인파가 규칙적으로 바로 월요일 저녁마다 라이프치히의 칸-마르크스-광장에 모이는 일이 가능했을까? 하기야 라이프치히에는 각별히 형성된 항거침재력이 존재했었다. 이곳은 동독에서도 대기오염과 건물실태가 가장 나쁜 상태였다. 시민들은 예배시간에 즈음해서 수년 동안 서독의 시민들과 접촉을 해오고 있었고 이에 덧붙여 가령 1968년 대학교회의 붕괴시에 개입한 국가권력의 횡포에 대한 악몽같은 기억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라이프치히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시피, 1982년이래로 매 월요일 오후 5시-6시 까지 시중심부의 칸-마르크스-광장으로부터 멀지 않은 니콜라이 교회에서는 평화의 기도회가 있어왔다. 사람들은 시위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의심을 받지않고도 이 광장으로 갈 수가 있었던 셈이다. 그리하여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이 충분히 보였을 때 그들 다수의 보호아래 사람들은 역시 익명의 구호를 외칠 수가 있었다. 첫번째의 월요일 데모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난 후로는 서로간에 부추기는 동원이 가능해졌고 이러한 행진이 하나의 사회적 사건으로 되는 귀결을 놓게 했던 것이다. 그 전에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신상에 좋다는 충고를 받

았다면 이제 그들은 오직 그 저항에 참여함으로써 상호간에 신뢰를 구축하게 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현된 '비폭력'이란 현상은 전적으로 경찰의 자체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했다는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기독교적 윤리의 우선적 구현이라는 논거도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그러기에는 교회적 영향력이 너무나 미미했던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는 점진적으로 개발되는 하나의 사회적 규범에 대한 지적이다. 그것은 '누조건적인 비폭력'이라는 것이다. 불만이 극에 달할 시에는 쉽게 공격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특히 자신의 욕구불만의 원천을 대변하는 자를 마주대하고 있을 때 일지라도 역시 시위자들은 오직 비폭력적으로만 상대방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자칭 인민의 이익대변자로서 모습을 보여준 권력을 正道에 옮겨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비폭력'이었던 셈이다. 권력이 시위의 적극가담자들을 형사법의 난동자로 몰아서 법정에 세울 수도 있었던 일을 그러한 '비폭력'이 막을 수 있게 해주었고, 그것은 데모대들에게 자신들의 공동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된 것이다.

그리하여 1989년 11월을 기해 무너지기 시작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가 1990년에 와서 별 이변없이 정상적인 법절차와 선거 및 국가 간의 조약이라는 형태로 급속하게 독일의 통일로 귀결된 과정을 한 마디로 서독체제로의 흡수·통합이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굳이 독일의 통일을 역사적 관점에서 달갑지 않게 여기고, 심지어 의문시하는 사람들로서 일군의 개혁주의적인 동·서독 지식인들이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의 통일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자본에 의한 식민지화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근거가 제시될 수 있다. 우선 자본주의가 지니고 있는 병폐로서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돈으로 지배하려는 경제제일주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자본가 내지 부르주아가 지배하는 착취의 구조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주장은 오늘의 자본주의를 다국적 신식민지제국주의 체제 또는 국가독점 자본주의체제로 보는 논리와도 일맥상통하기에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그러한 시각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다.

더구나 아직도 분단국가의 처지를 절감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분단의 극복으로 통하는 통일화 작업이 과연 그런 식으로 못마땅하게 여겨질 수 있는 문제이며 또 그러한 논리가 설득력을 지닐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통합화과정에서 추진되는 상이한 사상적 이질성의 극복작업 뿐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舊동독체제가 배태한 억압적 독재구조의 환부들을 도려내는 작업도 역시 만만찮은 문제점들을 산출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 II. 개혁사회주의자들의 통일관

우리는 논의를 동독문단에 한정시키기 위해서 ‘개혁사회주의자’라고 칭하는 일군의 지식인들을 예컨대 슈테판 하임(Stefan Heym), 하이너 뮐러(Heiner Müller), 크리스타 불프(Christa Wolf), 폴커 브라운(Volker Braun), 크리스토프 하인(Christoph Hein) 등 옛 동독의 중진세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에 국한시키로 한다. 그들이 독일의 재통일<sup>4</sup>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서방과의 논쟁에서 그들이 표방하고 있는 주요쟁점이 어디에 있는지가 이 단원의 관심사다.

여기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상기한 동독지식인들은 독일의 ‘재통일’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우리의 논지는 ‘권력’의 문제에 입각해서 그들의 민주주의관을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해석함으로써 그러한 정치관은 극복되어 마땅하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며, 따라서 그러한 판단을 지양하기 위한 전초적 기반으로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우선적으로 도모하고자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東과 西 사이의 쟁점으로서 상호간의 이해를 방해하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일이다.

### 1. ‘식민지화’로서의 통일

동베를린의 한 매체학자는 동·서독에 이중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기구들을 통합시키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동독 예술원이 서독 예술원으로 통합·해체될 경우(1992년 3월에 실제로 이 기구는 하나로 통합되었다) 브레히트-문서실과 하인리希 만-문서실 및 여타의 유산들을 서독 예술원에 넘긴다는 제안에 대해 차라리 “그렇다면 브레히트를 요코하마로 팔아버려라”는 식으로 이 사태에 대해 극히 자조적으로 논평한 바 있다. 문화유산들을 이들 점령자와 청산자들에게 넘겨주느니 차라리 누가되든 브레히트에게 우호적인 일본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것이 더 나을런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매체학자는 이렇게 부언한다. “오늘날 동베를린의 대화권에 개입하게 되는 사람은 지금까지 잘 사용하지 않던 ‘증오’라는 어휘의 등장에 대해 비리 각오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sup>5</sup> 왜냐하면 (재)통일은 목하 합병과 점령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정은 승리하는 자가 문화재산을 전리품으로서 —— 이 경우는 값진 브레히트-문서실을 —— 개선행진시에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이너 뮐러도 역시 독일의 ‘재통일’을 간결하게 다음과 같이 요약

4 여기서 ‘재통일’이라 함은 제2제국의 수립(1871)으로부터 바이마르공화국과 나치즘의 시기를 거쳐서 1945년 종전될 때까지 약 75년 간의 통일기가 냉전으로 접어들면서 동·서독으로 갈라 췄다가 이번에 다시 사회적 시장경제의 체제아래 하나의 연방국가로 통합되었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5 Wolfgang Kil, “Verkauft doch Brecht nach Yokohama”, in: *freitag*, 22.3.1991.

한다.<sup>6</sup> 그것은 “식민지화의 형태로”, 곧 “북·남 갈등”으로서 이루어진다.” 이는 말하자면 ‘부자와 빈자’ 사이의 갈등, “독일인 대 독일인”的 갈등을 뜻한다. “유럽, 어쩌면 전 세계가 마땅히 천재적 인물인 헬무트 콜에게 그 일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독일인들은 언제나 프랑스인, 영국인, 러시아인 등과 대항할 때만 통일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말하자면 ‘식민지화’가 냉소적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셈이다. 즉 그것은 전통적으로 다른 민족들을 거냥해왔던 독일의 권력욕이 이제는 ‘내국적인’ 투쟁을 통해서 중화되는 기회로 평가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논박의 수준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 배후에는 동독의 주민들이 서독의 ‘식민화’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집단경험’, 즉 원칙적으로 동독에서는 보다 나은 것, 곧 자본주의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는 의미에서 ‘미래’가 구상되어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희망도 숨어있는 것이다.

舊동독작가동맹의 기관지였던 “노이에 도이체 리테라투어 Neue Deutsche Literatur” (=새 독일문학)의 편집장 리어쉬는 뛸러가 거론한 것을 부연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는 크리스타 볼프가 1990년 6월에 발표하여 독일 문단에서 많은 불의를 일으켰던 작품 《남는 것 Was bleibt》<sup>7</sup>에 대한 쉬이마허(Schirrmacher)의 비판<sup>8</sup>과 관련해서 1919년에 말한 하인리히 만(Heinrich Mann)의 표현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인용한다. “독일제국과 독일적 성향은 1871년 (프랑스를 제압한) 승리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다. 이러한 父子관계에서 연유하는 ‘저주’는 그 후로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sup>9</sup> 이제 새로 통일된 독일에서도 역시 다시금 하나의 승리가 통일의 父子관계를 상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리어쉬는 그러한 병렬화를 통해 옛 저주가 계속 생명을 유지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승리자의 심성이 역시 새로운 독일의 성향을 각인할 것이며 따라서 새로운 파국을 불러올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통일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이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 과한 심성의 특징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紙(=FAZ)에서 표출되고 있는 것처럼 자본의 이해관계와 아래로부터 생겨나는 네오나치즘을 상호 연결짓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크리스타 볼프는 스스로 동독을 선택함으로써 ‘국가시인’이 되지만, 브레히트는 ‘개같은 유태놈’이 되는 것이다. 앞의 표현은 FAZ에서 읽을 수 있었고 뒤의 표현은 브레히트의 묘비에서 읽을 수 있었던 것이다.”<sup>10</sup> 리어쉬의 견해에 따르면 시기적으로 볼프의 작품비평과 거의 동시에 발생한 브레히트 묘비의 혼은 FAZ와 차이트(DIE ZEIT)

6 Heiner Müller, Was wird aus dem größeren Deutschland?, in: *Sinn und Form* 4/94, S.666.

7 이로 인해 야기된 논쟁에 관해서는 염승섭, “크리스타 볼프의 중편 「남는 것」의 의미”, 『뷔히너와 현대문학』 4/1991, pp.9-29; Sam-Huan Ahn, “Literaturstreit um Christa Wolfs *Was bleibt* — vom immer noch geteilten Korea aus betrachtet”, in: *Deutschlandforschung* 1/1992, pp.38-53 및 Friedemann Spicker, “Wie gehört zusammen, was zusammenwächst?”, 『獨逸文學』, 第45輯, pp.377-406 참조.

8 Frank Schirrmacher, “Dem Druck des härteren, strengerem Lcbeins standhalten”, i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 Juni 1990 참조.

9 Werner Liersch, “Was interessiert”, in: *ndl* 10/90, S.133.

10 같은 것.

紙의 문예란<sup>11</sup>에서 표출된 부르주아의 공격성을 개념화시키고 있고 또 그것의 파시즘적인 ‘고유한 정신’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 정신이란 FAZ-문예란과 묘비훼손을 통사론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묶는 논박적 메시지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동독의 붕괴를 자본주의적 서방의 승리로 성격지우는 것은 물론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 연방공화국은 정치적으로 50년대의 수준으로 고착화되고 만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식으로 사태를 보는 것은 동독의 몰락을 인지하는 가운데 동독의 박파쇼적 정체성을 주장하도록 허용해주는 결과가 되고 또 전통적으로 이웃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독일인의 심성에 잠재적으로 파쇼적 기질을 귀속시키는 일을 가설적으로 허용하는 처리방식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그것은 마치 1933년 나치의 권력장악이 혹은 나치가 수행한 1940/41년 유럽의 정복전쟁이 지금 새로이 근대적 형태로 다시 반복된 것처럼 해석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 2. 파시즘/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개혁사회주의

대체로 동독 지식인들은 동독을 제압하고 승리를 쟁취한 것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파시즘이라는 점을 강변하려는 경향을 견지한다. 물론 이 경우 사회민주주의는 정당정치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기반 위에서 사회정책과 법치국가를 연결시키는 서구의 전형적인 사회형태로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라는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세계대전들의 파국, 전세계적인 경제공황 및 독일의 나치즘이 있은 후로 사회민주주의적 혁명이 서구에서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작업이 소수의 무력폭력행위를 통해서가 아니고, 오랜 기간에 걸친 노동조합적인, 의회 정치적인, 언론을 통한 합법적인 계급투쟁을 통해서 수행되었기 때문이다.”<sup>1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대부분의 동독 지식인들이 인정하려 들지 않는데에서 바로 현 상황에 대한 견해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들이 자본주의=파시즘이라는 敵의 이미지를 고집하는 것은 동시에 사회민주주의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 왜냐하면 이제는 파시즘과 사회민주주의의 공변관계를 구상하는 일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파시즘이라는 敌의 이미지를 고수하기 위해서 동독의 지식인들은 지난날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에 있었던 100여 년이 넘는 대결에서 끝내 사회민주주의가 관철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지금 자신들의 과거가 평가절하되는 실존적 압박에 처한 좌파지식인들의 현실이 날라질 수는 없다. 자신들의 삶의 과정에서 투자한 고도의 적극성이 역사의 발전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확신이 이제는 불투명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sup>11</sup> “Was bleibt. Bleibt was? Pro und Kontra: eine Zeit-Kontroverse über Christa Wolf und ihre neue Erzählung”, in: *Die Zeit* Nr.23(1.Juni 1990), Feuilleton: bes. Ulrich Greiner, “Mangel an Feingefühl”, Volker Hage, “Kunstvolle Prosa”, Helga Königsdorf, “Der Schmerz über das eigene Versagen” 참조.

<sup>12</sup> *Der Spiegel* 37/91, S.164.

이 때의 역사과정은 사회주의의 점진적인 개선으로서 상정된 것이다. 개혁의 관점에서 혁명적인 인내는 희망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제 이 연결이 결국 기만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희망은 함정으로서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 많은 동독 지식인들에게 폴커 브라운의 시 <나는 아직도 여기 있는데, 나의 조국은 서방으로 떠나가구나 Da bin ich noch: mein Land geht in den Westen>(1990.7)는 방향상실에 대한 이러한 심리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통한다. 게다가 60년대와 70년대를 대표하는 동독문학은 대부분 개혁의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경향으로 일관된 측면을 지녔었고 또 미래의 지평도 열려 있었기에 그것의 투사면으로 볼 수 있는 현재가 비록 괴로운 모순들로 점철되어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해소되리라는 희망으로 대수롭지 않게 그것을 감내할 자세를 견지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이너 뮐러의 ‘전율의 미학’조차도 이러한 기능을 가졌다. 전율이 새로운 것의 최초의 현현이라는 그의 원초적 공식구는 그러한 의도를 개념화하고 있는 것이다. 동독의 과기가 점차적으로 평가절하되는 압박을 받게 되자 뮐러는 나시금 개혁사회주의자들 간에 가장 값진 것으로 통했던 것, 즉 동독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한 가지 대안이라는 의미에서 “미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sup>13</sup> 하지만 이러한 미래의 관점을 견지하는 일, 즉 유토피아를 구축하는 작업은 역시 “다수에 반하는 국가적 권력”으로서 ‘장벽과 바우체’(=동독의 악명높은 감옥)을 조건부로 했다는 사실을 이 시점에서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자신이 정말 사회주의를 원하는지, 그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대다수 동독주민들에 대해서 ‘자유선거의 차입’과 같은 부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스탈린이나 헤틀러시대에 있었던 육체적 가혹행위나 생명의 제거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억압의 교묘한 형태로 테러를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현대판 테러시스템의 의미에서 노골적인 폭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의 목표는 모든 전체주의적 시스템에서처럼 사람들을 자기나라에 감금시킴으로써 정치적 보편의지가 형성되거나 개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데에 있었던 것이다. 실상은 분명하였다. 실제로 자유선거는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프로젝트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동독작가들의 민주주의 구상은 다수의 원칙인 전체의지의 원칙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취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시점에서 그들이 구상한 이상적인 사회주의관은 공식적인 현실 사회주의와도 상당한 거리를 두면서 엘리트적인 유토피아관으로 일관한 것이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뿐만아니라 그런 차원의 문제가 기론되는 것도 실은 고르바초프의 권력승계의 해(1985년) 이후에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다.<sup>14</sup> 그러니까 동독주민의 다수가 개혁사회주의에 아마도 찬성하리라는 환상이 작가들의 상상력과 용기를 자극함으로써 그들은 다분히 전면적이 되어버린 봉괴의 잠재력을 마음대로 펼쳐보일 수 있었던 것이다. 브라운의 《과

<sup>13</sup> Heiner Müller, Was wird aus dem größeren Deutschland? Fragen von Alexander Weigel, in: *Sinn und Form* 4/91, S.666.

<sup>14</sup> Wolfgang Emmerich, *Kleine Literaturgeschichte der DDR*, Frankfurt a.M., 1989, S.415f. 참조.

도기사회 Übergangsgesellschaft》(1987)나 하인의 《원탁의 기사들 Die Ritter der Tafelrunde》(1988) 같은 텍스트들은 물론 문학이라는 방식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아무튼 옛 사회주의통일당 지도부의 권위를 해체시키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 黨상충부의 훈시가 능성은 보다 강하게 의문시되고 있고 당지도부로부터 거리를 취하게 되는 정도는 극단적이 된다. 또한 활기찬 새로운 시작을 구상하고 온갖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상상해보는 일조차 과감하게 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타 불프가 문학적으로 얼마나 냉혹하게 동독의 과거와 청산을 하고 있고 또 그림으로써 공통의 정치적 이해의 지평을 열고 있는지는 그의 소설 《남는 것》이 보여주고 있다. 그 작품 속에서 그녀는 비교적 저급한 차원으로 보여질 수 있는 한 단계, 즉 오랜 기간동안 주택의 안팎과 친구권에 이르기까지 주인공에 대해 시위적으로 수행된 미행을 예화로 하여 국가적 억압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미행의 작용은 역시 곧바로 테러로서 경험되는 것이다. ‘빈틈없는 포위’가 거론되고 있다. 위협의 자의성이 공포를 상승시켜 “암도하는 투명한 불안으로” 만든다. 지속적인 위협은 금기야 놓일성의 상실을 가져오게 되고 이로 인해 생기는 불안한 마음은 버림받았다는 의식으로 또 다시 이행하는 본질상의 변화를 낳게 된다.

“실존의 차압”이라는 공식으로 이 과정이 이미지화되기도 한다. 그것의 정치적 의미는 예속과 획일화를 달성하기 위한 겁주기라는 것이다. 여기서 직접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인격의 핵심, 곧 자존을 공격하는 전체주의적 지배의 본질과 기능이다. 존엄성의 박탈과정에서 자기포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자해의 메카니즘이 작동한다. 서술적 여성은 이 관점을 自國에 대한 엄청난 비난으로 공식화하고 있다. ‘형편이 말이 아니다’나 ‘보잘 것이 없다’는 식의 비난은 핵심을 찌르는 표현이다. 이 비난은 동독의 반파쇼적 자기이해를 무화시킨다. 이로써 국가가 지난 반파쇼적 아우라는 소멸된다. 크리스타 불프는 동독의 과거가 지난 도덕적인 가치를 박탈하는 작업을 어쩌면 소설 《카산드라》에서 보다도 더 극단적으로 《남는 것》에서 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소설 《카산드라》도 물론 알레고리를 통해 동독을 경찰국가로 형상화함으로써 이미 전체주의의 비난을 펴붓고 있다. 하지만 전체주의적인 것에 대해 《남는 것》에서 그어지고 있는 경계는 더 첨예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구상은 테러를 국가적인 압력수단으로서 배제하고 있는 서방의 민주주의관(권력분할, 권력의 투명성, 여론에 의한 통제, 법치국가성 등등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테러와 결코 동맹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일찌기 이자크 슈타인베르크는 철저히 요구한 바 있다. 그는 1917년 10월 혁명후 최초의 법률인민위원회였고 권력을 잡은 사회주의에 대한 자신의 경험의 꿈자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 바 있다. “그러나 만약 다른 길이 없다면, 즉 테러없이는 사태의 유용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단 한가지 대답이 있을 뿐이다: 그러할 땐 역시 우리는 그러한 유용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럴 때는 우리의 문제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것이다.”[...] “사회주의는 현재 테러없이는 결코 실현될 수 없고 또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견해를 내가 만약 지닌다면, 나는 역시 영원히 사회주

의를 거부할 것이다.”<sup>15</sup> 슈타인베르크는 절대주의에 대항하는 혁명적인 폭력은 인정한다. 그러나 테러만은 비판하고 있다. 그는 폭력과 테러 간의 차이에 관한 자신의 저서를 1920-23까지의 시기에도 모스크바에서 저술했지만 그 후 도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가 그것을 《혁명에 있어서 폭력과 테러》라는 제하에 출판한 것은 1931년 독일의 로볼트출판사에서 였다. 테러의 유용성과 정당성에 대한 물음에 대해 그가 분명한 대답을 하는데에는 1917/18년 사이 단 반년 간의 혁명적 실천경험으로 족했던 것이다.

이러한 철저한 반테러리즘적인 맥락에서 볼 때 하이너 뮐러는 역시 미래에도 크리스토 블프와는 다른 자세를 취할 것이다. 그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사회주의의 프로젝트를 그것의 실패 후에도 역시 정당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사회주의 동독이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고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뮐러가 생각하기에 새로운 독일은 “보다 약한 독일일 것이다. 40년동안 최면술에 걸린 후 뱀은 작은 토끼를 집어삼키기는 했지만 그 토끼는 한마리 고슴도치였음이 밝혀질 듯하다. 그런데 잘 알려진 것처럼 고슴도치는 오래 겨울잠을 잘 수 있는 법이다.”<sup>16</sup>

이와 같은 이미지 속에는 지금 수많은 동독의 좌파지식인들에게서 발견되는 ‘기회주의’ 자세가 표출되고 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는 텍스트의 문맥에서 드러난다. 장래에 있을 갈등에서는 사회적으로 불만족해 하는 주민들과 동맹을 맺고 혁명적인 동일성을 재탈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이너 뮐러는 동독을 통합시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만족스럽고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통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서독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이다. 이 과제가 엄청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뮐러는 이러한 과제에 처해 있는 것은 단지 서독 혼자만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는 유럽이라는 사실을 과소평가한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1871년의 제국수립과 비교하는 일을 그릇된 것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벨러식의 논의에서는 현대적 민족국가의 기능이 과대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모든 중요한 결정들은 (에너지정치, 교통정치, 재정정치, 안보정치, 환경정치 등등에 있어서) 대체로 민족국가를 초월하는 타국들과의 협력과 협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호적인 통합과정은 유고에서의 민족전쟁이나 구소련에서의 민족국가들의 자립화에도 불구하고 되돌릴 수 없게 되었고 그 사이 급속한 진전을 보임으로써 유럽의 기대 통합형태로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1870년이나 1933년의 민족국가는 오늘날의 민족국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뮐러가 지닌 파시즘에 대한 환영들은 근거가 없다. 파시즘의 환영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실질을 오늘의 민족국가는 지니고 있지 않다고 봄이 맞는 말이기 때문이다.

15 Isaak Steinberg, *Gewalt und Terror in der Revolution*. Nachdruck, Berlin(Karin Kramer Verlag) 1981, 2.Aufl., S.149.

16 Heiner Müller, Was wird aus dem größeren Deutschland?, a.a.O., S.667.

### 3. 사회주의보다도 더 오래 된 ‘서방’에 대한 방어적 태도

장벽이 열린 후 노장세대의 동독작가들을 특별히 분노케 한 것은 동독주민들의 구매 욕이었다. 폴커 브라운은 ‘창녀’라는 이미지를 사용한다. “이 나라는 스스로 얼마 안되는 장식품조차도 내팽개쳐 버린다. 겨울에 이어 욕망의 여름이 온다.”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동독 지식인들은 그들이 이미 언제나 추정해 왔던 바인, 도덕적 비성숙을 동독 주민 대다수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바로 지식인들이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사회주의통일당과의 동맹관계에서 자유선거의 거부를 용인해왔다는 자기비난의 집을 덜고자 하는 자기합리화의 한 방식일 것이다.

크리스탸 불프는 주민을 처벌하려는 듯한 눈초리를 사제적인 태도로 고조시킨다. 인민은 자신의 동일성을 “불경스럽게” 부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간주되는 것이다. 불경스럽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영악하고 성스러운 동독의 정체성을 더럽히는 짓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새로운 개혁사회주의의 모델로 방향을 돌리지 않고 소비쪽으로, 즉 서방정당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의 행동이 그렇게 비쳐졌던 것이다. 아무튼 “사방으로 풍지박산 뿔뿔이 흩어져버린 것이다.” 불프의 시선은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는 올림푸스의 신과 같은 눈길이다. 그녀는 인민의 행태를 마치 개미떼의 흩어짐처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당신은 한 개미떼가 그 밑에서 자신들의 삶을 그토록 오래 정당하게 그러나 여의치 않게 꾸려나와야했던 그 돌덩이를 당신이 지금 뒤집어놓는다고 할 때, 쉽게 역겨움을 느끼게 될 관찰자의 눈 아래 그 개미떼가 불경스럽게도 자신의 동일성을 거부하면서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포괄적인 귀결을 짓고자 할 경우 그 개미떼의 생활방식에 관해 가장 확실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어처구니없는 비교라고요? 하지만 한 觀淫症者の 차가운 시선이 나에게 그런 비교를 하도록 부추긴 기립니다[...].”<sup>17</sup> 명백하게 이러한 텍스트 대목에서는 다수의 주민들에 대해 취해지는 거리감 같은 것이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엔 또한 주민들의 보편적 의지, 즉 부인할 수 없는 짐짓 절대적인 동일성이 투영되어 있음도 알아볼 수 있다.

이처럼 작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와 같은 자만의 형식은 서방의 민주주의관에는 낮설다고 여겨진다. 텍스트의 전체문맥에서 볼 때 불프의 동경은 ‘군주권’의 이념에 의해 서이지 결코 형식적인 동등권의 사상, 곧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는 민주주의 구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유럽의 정치사에서는 이 두 원칙이 오래 동안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다. 특히 독일에서는 군주권의 전통이 강했고, 이 전통은 자주 議會主義的 代議體制와 경합을 벌여 이득을 보기도 했다. 의회주의체제는 평면적인 것으로 통했고 또 민중의 진정한 대변, 곧 참된 동일성보다는 우연, 정당간의 싸움 및 불질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sup>17</sup> Christa Wolf, Wo ist euer Lächeln geblieben?, in: du, Die Zeitschrift der Kultur, 7/91 (“Brachland Deutschland”), S.23.

의당 노론에 붙여져야 할 이러한 반서방적인 정치구상들의 전통노선은 보다 광범위하게 200년에 걸친 보수적이고 좌파적 문명비판의 독일적 전통으로 틀지워져야 할 것이다. 이 전통은 동독에서, 특히 그 나라의 작가들 사이에서 끈질지게 명맥을 유지해온 것이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따질 때 반서방적 자세들은 독일의 문화사와 정신사에 깊숙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 자세들은 사회주의의 역사보다도 더 오래되었고 또 새 연방주들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계속 살아서 숨 쉴 것이며 또한 논전도 야기시킬 것이다. 필경 앞으로도 오래 명맥을 유지하리라고 보여지는 것은 바로 그런 전통이며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마지막 잔존불이 아니 오래 전에 망각되어버렸을 때에도 역시 그 것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본다면 너무 비관적이라는 지적을 받을까.

#### 4. 공생관계에 있는 서방의 협력과 유럽의 통합

이러한 맥락에서 그 동안 눈에 띠지 않게 진행돼 온 유럽공동체(EC)의 통합운동에 왜 독일이 적극적이었는가를 일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그 동안 EC통합계획은 문제가 복잡하고 그것이 실천될 때까지는 오랜 협상을 거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었고 그 성과도 잘 눈에 띠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30여년 간을 되돌아보면 EC는 처음에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통합을 여러 분야에서 실현시켰다. EC의 통합에 항상 제동을 걸어온 영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EC회원국들이 두 가지 통합, 즉 경제통화 통합과 정치통합안에 합의를 보았고 금세기 안에 EC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단일통화를 유통시킨다는 조약도 체결된 단계이다. 외교안보분야에서도 정치통합을 이루하려는 획기적인 개혁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EC는 미국과 같은 합중국까지는 못된다 하더라도 회원국의 단순한 총화를 넘는 독립된 정치적 인격을 갖게 된다.

이미 지난 10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7개국이 EC의 단일시장에 합류했으며, 요즈음도 EC에 가입을 회망하는 회원후보수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다. 중부유럽의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헤고에서 탈퇴해 국가승인을 받게 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발트 3국은 물론 모스크바에서 독립을 선언한 전소련의 공화국들 중에서도 가입 신청을 하고 있다. 장차 EC회원국은 24개국에서 30개국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거대해지는 EC가 외교안보문제에 관해 회원국의 의사에 일일이 구애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될 때 그 영향력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짐작되고도 남는다. 이것이 적어도 유럽연방주의자들이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다.

EC가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회원국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권 행사의 제약을 감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이 EC의 통합운동에 반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EC는 유럽공동시장(EFC)을 발족시킨 1957년의 로마조약정신에 따라 지난 30여년 간 단순한 경제블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만족치 않고 꾸준히 유럽통합의 노력을 그치지 않았다. 지난 '89년 동구공산권이 붕괴되고 재편되는 새 유럽에서 EC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회원국들의 반응과 동구변혁의 부산물로 나타난 독일의 통일은 EC의 정치통합운동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통일된 독일에서 우려되는 어떤 ‘탈선같은 것’을 막으려면 EC를 강화해서 연방성격을 띤 EC가 독일의 행동자유를 제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밸상이 이러한 운동의 바탕에 깔려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독일의 어두운 그림자도 역시 EC통합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된 셈이다. 독일과 국경을 함께 하고 있는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룩셈부르크 등은 이같은 설명을 끝 이해할 수 있었고, 더구나 독일의 콜 총리와 겐셔 외무장관도 이러한 구상에 동감했던 것이다. 이는 외국사람들이 우려하는 독일팽창주의의 위험을 인정해서라기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독일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경계심을 가라앉히고 그들이 독일의 자랑스럽지 못한 과거를 더이상 들먹이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되며 또 EC를 역시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독일 정치인들은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EC의 정치통합을 앞장서 주장하였고 콜 총리도 유럽의회의 권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EC의 정치통합에 진전이 없으면 경제통합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독일이 동독의 흡수로 18석의 의석을 추가로 배정받아 유럽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회원국이 됨으로써 의회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러한 주장과 무관치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은 EC 최강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EC를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통일후 독일이 다른 회원국들에 갑자기 서인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독일의 경제력 못지않게 프랑스나 영국, 이탈리아의 국내 정치적, 경제적 취약점이 상승작용을 한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마스트리히트 정상회담과 조약체결은 EC 내에서 독일의 주도적 지위를 부각시켜주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 위상의 변화는 앞으로 EC의 장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다고 보는 것이 주변국의 견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적인 자만에 대해 또한 온건하게 재통을 건려는 사세도 있음을 다음의 한 예를 통해 살펴보면서 독일통일과 유럽통합에 츠음한 독일인들의 역사를 반추하는 모습을 확인해본다.

### III. 독일의 歷史像과 과거청산의 문제성

독일적 전통에 대한 부정적인 분석에 덧붙여서 예켈(Eberhard Jäckel, 62세, 현 독일 슈투트가르트대학 현대사 교수)은 목하 진행되고 있는 독일의 통합화 작업을 이렇게 평한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이중적인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의 민족이 될 것이다. 더구나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절도있게 우리들의 歷史像을 극명한 비교를 통해서 분화시키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통일은 우리들로 하여금 50년대의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한 것이다. 또다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다.”<sup>18</sup>

<sup>18</sup> Der Spiegel, 52/1991, S.43f.

여기서 예첼이 말하는 이중적 과거는 바로 히틀러독재의 과거와 구동독 공산주의의 슈타지시절을 동시에 일컫는다. 통일을 이룩한 독일은 현재 이러한 쓰라린 과거의 청산문제를 놓고 나치즘(국가사회주의)과 슈타지(국가보안부) 사이에서 고뇌하면서 1992년을 넘기면서도 홀가분한 영일이 없이 긴장의 나날을 맞고 있다. 그러한 과거 청산문제가 해소될 날이 언제일지는 심히 불투명하다. 게다가 1992년 1월1일을 기해 슈타지 비밀문서 열람을 허용하는 〈슈타지-문서법 Stasi-Akten-Gesetz〉이 효력을 발함으로써 지난 날의 악봉을 새삼 반추하면서 원한을 풀려는 못사람들의 행렬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슈퍼겔》지는 독일의 과거가 지운 짐을 벗어던지려는 이러한 행렬을 눈앞에 두고 “권리인가 아니면 복수인가”라는 제목을 표지에 내걸기도 했다.

물론 한국적 시각에서 볼 때 통합을 성취하고도 지난 날의 무거운 짐때문에 곤욕을 치루고 있는 모습은 즐거운 ‘비명’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런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실로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그러한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그런 문제는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음을 자각하게 된다. 따지고 보면 구동독시민들이 슈타지(STASI)와 연루되었던 사실 바로 그것이 새삼스럽게 독일인들을 다시 둘로 갈라놓고 있는 셈이다. 통합이 되고서도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기막힌 일들이 이제 사백일하에 노출되기 시작하는 데서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이다. 더구나 사실을 얼버무리고 싶어 하는 호도적 심리와 정치적인 순진함은 동베를린의 흉볼트대학총장이던 하인리히 핑크(Heinrich Fink)와 시인 알렉산더 안더존(Alexander Anderson) 같은 슈타지-밀고자들을 응호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의 난처함이 통합의 문제를 더 어렵게 하는지도 모른다. 더구나 이러한 사건의 배후에는 통합으로 인해 새 주인이 된 서독인들의 새로운 위상에 대해서 동독인들이 느끼는 일말의 불안감 같은 것이 배후에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의 통일을 진정한 통합으로 보지 않고 서독의 마르크貨에 의한 일방적인 ‘점령’, ‘식민지화’ 내지 ‘실지탈환’으로 보는 시각이 어떤 의미에서 설득력을 얻는지도 모른다. 앞에서 확인했듯이 지금도 많은 구동독지식인들, 특히 하이너 월러같은 개혁사회주의적 작가들의 생각이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있고, 심지어 구서독의 자식인들조차도 상당수 그러한 관점에 동조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아부튼 이러한 시각이 아직도 살아남아서 그와 정반대되는 국우세력들의 부상을 망령처럼 부채질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면 그 갈등의 여파는 쉬상치 않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러한 사고들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해서 비로소 시각교정이 상호 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자평확장의 미덕도 대화적으로 가꾸어질 수 있다면, 민주주의의 강점은 바로 그런 곳에 놓여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관점에서 통일을 이룩하고서도 내적으로 상충하고 있는 여러 갈래의 상이한 사고들이 지난 이질화 문제를 과거청산의 틀 내에서 짚어봄으로써 그것의 분화상을 대조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그나름으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식민지 시대에 대한 과거청산에 미온적이었던 지난날 우리의 불찰과 또 정권이 강압적으로 바뀔 때마다 청산문제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불철저했던 우리의 실정을 반성하고 아울러 자신의 범죄적 행위와 치부를 한사코 은폐

하기에 굽급해하는 듯한 이웃나라 일본의 꿀불견과 대조해 볼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비교작업은 우리에게도 교훈적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1. 독일의 이중적 과거

예첼의 지론에 따른다면 “독일의 재통일과 더불어 역시 독일의 역사像도 변하고 있다. 이 말은 과거에 대해 역사연구가 투기하는 표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표상은 공론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성격을 지닌다. 역사상은 차라리 각 민족이 다소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가운데 자신의 과거에 대해 그리게 되는 지배적인 표상을 일컫는다. 이 이미지는 새로운 사건의 발생과 더불어 변하게 되고 필요에 부응함으로써 현재를 규정한다. 그것은 유행과 같은 것이다. 역시 그것은 명백하게 정의될 수 없기에 그것에 승복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추세는 오해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sup>19</sup>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냉전의 정점에서 탄생한 서독은 즉각 상용하는 역사상을 발전시켰다. 그것은 한국의 경우처럼 전적으로 反공산주의적 징표를 띠고 있었다. 그래서 그 역사상은 나치즘(국가사회주의)의 “붕괴”를 뛰어넘어 계속성과 통합을 가능케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국가사회주의도 역시 反공산주의적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독일적 역사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그 전에 나치당원들이었던 자들은 그러한 서독의 역사상과 더불어 스스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성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날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들은 反공산주의적이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정당성을 견지하였고, 따라서 그들은 그런 점에서 계속 서독체제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이다. 히틀러의 파시즘이 창궐하던 그 당시에 좀 더 용감하게 저항하지 못했다하여 비난받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대항전에서는 나치시대에 하지 못했던 일을 수행함으로써 스스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역사의 像들은 그것들이 전파하는 구호들 속에서 제일 잘 파악될 수 있다. 50년대의 구호는 이제 지난날의 부끄러운 역사와 “종결 짓도록 하라”고 권고하였다. 지식인들이란 언제나 그런 것처럼 대체로 어디서나 체제에 봉사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서독에서도 지배적인 역사상에 대립했던 지식인들은 단지 소수에 불과했었다.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현실인정을 위한 증거들을 제공하기를 더 좋아했던 것이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전체주의 이론’이었다. 포퍼가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전체주의의 전형으로서 각기 파시즘과 공산주의로 통칭되는 이 두 독재들은 결국 동일한 성격의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중 하나는 몰락했지만, 다른 하나는 당면한 위협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공론은 집중적으로 공산주의의 방어에 전념하였던 것이다. 사람들은 서독편에 서는 것을 올바른 행위라고 생각함으로써 자신들이 겪은 지난날의 부끄러운 과거를 마음 속으로 억압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sup>19</sup> Der Spiegel, 52/1991, S.43f. 이 단원은 주로 이 출처에 근거해서 재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60년대 이래로 서독에서 지속된 공개적 토론을 통해서 이러한 관점은 수정되기 시작했다. 스탈린주의가 막을 내리자 동독에서는 그에 이어 개혁이 뒤따랐고 서독에서도 새로운 동방정책을 통해서 지난날의 상처에 적극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당시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이 추구되었다. 그 여파로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은 퇴조하기에 이른다. 이에 반해 다른 한편에서는 나치즘(국가사회주의)이 저지른 범죄가 더 분명하게 가시화될 수 있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전개된 아우슈비츠-소송 같은 재판절차, 새로운 자료들의 발굴 및 역사에 대한 연구들은 나치즘을 독일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章으로서 “재정리”되는데 일조를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82년의 ‘보수적’ 정권의 교체와 더불어 독일의 역사像에는 다시 한번 약간의 추이가 이루어진다. 끝내 제3제국의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정이 이제는 구호로써 표출된다. 그리하여 자신의 자랑스럽지 못한 과거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급기야 역사가들 사이의 뜨거운 논쟁(1986)으로 발전하였고, 그 결과 ‘전체주의론’(Totalitarismustheorie)은 ‘수렴론’(Konvergenztheorie)<sup>20</sup>으로 대체되는 양상을 빛게 된다. 실제로 공산주의는 스스로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점진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기에 이른다(예컨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등). 그리하여 이 세기의 주된 악은 바로 파시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지나치게 반공산주의적인 태도를 취한 자들은 ‘반동’으로 간주되었고 또 시대적 감각이 없는 자로서 몰림을 받기도 했다.

그러다가 끝내 SED-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폐괴된 것은 단지 동독의 역사像, 즉 위로부터 처방된 반파시즘만은 아니다. 시대의 ‘전환’은 이제 전체독일의 역사상으로 확장된 서독의 역사상에도 역시 추이를 물고 온 것이다. 전면에는 집단묘지를 갖춘 소련의 정치법수용소들이 등장하기에 이른다. 나치당원들이 항시 ‘볼셰비즘은 범죄적이다’라고 말한 사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던 자들은 역시 나치들이 옳았다고 말하기까지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엉뚱하게도 슈타지의 괴물이 사람들의 정서를 사로잡음으로써 반사적으로 나치즘과 슈타지의 체제가 서로 동일하다는 생각이 다시금 무대에 출현하고 있는 데에서 많은 식자들은 아연해하고 있다.

실로 지금의 여론은 모두 동독이 저지른 범죄에 몰두하고 있는 감마저 듦다. 제2의 뉴른베르크를 방불케하는 재판에 대한 생각이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한때 탈나치즘화에 몰랐던 때처럼 동독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정당화시켜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것이다. 현재 동독에 관해서 그려지고 있는 역사상은 실제로 동독이 존재했던 그 당시보다도 극적으로 더 어두운 실정이다. 당시 시대의 행보에 걸음걸이를 같이 하고자 한 사람들은 전후의 동독은 서독보다도 여러 면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이루어낸, 작기는 하지만 보다 기특한 국가로 보기도 했다. 여성의 동등권은 서독보다도 진일보했었고, 유아원은 모범적인 것이 사실이었다. 물론 주민들의

<sup>20</sup> Kulturpolitisches Wörterbuch. Bundesrepublik Deutschland/DDR im Vergleich, Stuttgart 1983, S.328f. 참조.

자유를 박탈하고 감금한 일은 지탄받아 마땅한 것이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여행의 자유는 중대일로에 있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만 더 지원을 받고 부추겨졌더라면 필경 SED-정권은 민주적인 정당으로 탈바꿈했을지도 모른다는 긍정적인 낙관론도 없는 것은 아니다.

당시 서독을 방문했던 호네카는 의전상 필요 이상으로 대접을 받기도 했지만, 그는 역시 아이히만처럼 독일인들에 의해서 추격을 받고 법정에 서는 신세가 되었고, 또 동독이 건재했을 때는 신학자 평크도 환호를 받은 평화의 사도였으나, 지금은 드 메지에 르처럼 주역의 무대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하지만 이에 비해 소련에서는 여태 여하한 스탈린의 앞잡이도 법정에 끌려나온 적이 없고, 또 동구권에 속했던 여타의 다른 나라에서도 범적 청산문제는 역시 한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왜 독일에서만은 유달리 ‘나치즘’과 ‘슈타지’의 이중적 과거가 마치 두 번씩이나 동일했던 것처럼 도매금으로 처단을 받고 있는가 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생겨나기도 한다.

## 2. 비교를 통한 歷史像의 문화와 그 위상

“역사의 이미지들은 터부를 통해서 방어되는 법이다. 입에 담아서는 안되는 특정한 사물들이 있게 된다. 말하자면 독일의 경우에는 비교의 작업 대신에 동일시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난번 ‘역사가의 논쟁’에서도 그러했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정반대의 경우가 옳을 것이다. 동일시 대신에 비교하는 일이 추진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국가사회주의적 유태인학살이 유일무이한 양상의 죄악이었는지의 여부는 다른 경우의 대량살상들과 비교함으로써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고 또 현재에도 그럴 것이다. 독일인들은 그걸 식으로 이제 자신의 이중적 과거에 대한 태도를 정리해야 할 것이다. 비교하고 또 무엇이 비도덕적이었는지를 계산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자명하다고 여겼던 사실들의 진위를 밝혀내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독일사회가 자신의 과거와 동족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려는 의사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비교의 터부를 깨뜨려야만 한다. 그리하여 철저하고 면밀히 비교를 추진해야만 할 것이다.”<sup>21</sup>

이러한 전제에서 독일인들이 현재 슈타지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모습은 어쩌면 구동독을 냉혹하게도 나치즘의 경우처럼 스탈린주의와 한 솔에다 넣고 휘젓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나치즘과 스탈린주의 및 슈타지의 문제는 세 가지의 각기 다른 차원의 사안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인권과 자유선거가 배제되었던 독재라는 의미에서는 서로가 동일하다. 하지만 그와 유사한 경우는 제3세계에서 최근까지도 드물지 않게 목격되었던 셈이다. 따라서 독재의 실상은 비교를 통해서 비로소 파악되며 또 그것들 간에는 일치하는 점보다는 더 많은 차이점들이 있음을 결과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우선 소련의 스탈린주의와 동독을 비교함에 있어서 그것들은 연대기적으로 너무 가

<sup>21</sup> Der Spiegel, 52/1991, S.43.

까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40년 남짓한 동독의 역사에 있어서 스탈린의 시대는 불과 4년에 해당된다. 1953년 그 독재자의 죽음과 더불어 피의 속 청으로 얼룩진 형태의 스탈린주의는 동독에서도 종막을 고했던 것이다. 동독에서는 전 시용 재판들도 없었고 대량학살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런 점을 SED-권력자의 공적으로 돌려져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동독이 30년대나 40년대의 소련처럼 그렇게 비인도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동독은 말의 진정한 의미에서 결코 스탈린주의적이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비어만 같은 이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지 모른다.

아무튼 독일의 역사상과 거기서 귀결되는 정치적 결과들을 위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동독을 나치즘과 비교검토하는 일이다. 공산주의와는 달리 나치즘은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것이 아니다. 히틀러는 모스크바출신이 아니었다. 이 두 정권이 다같이 독재체제였음은 분명하지만 동독은 공격적인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었고 민족의 살상을 자행하지도 않았다. 반면에 히틀러정권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본질적인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역시 정신적 기반도 비교될 수 있다. 어디까지나 사회주의는 적잖은 숫자의 매우 고귀한 사상가들이 한 때(대체로 짧았을 적에) 몰입한 적이 있는 하나의 이념인 것만은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이 사상이 레닌의 혁명과 더불어 바로 공산특권 계급의 독재로 탈바꿈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특정 가치들은 완전히 몰락하지는 않았다. 하나의 새로운, 보다 나은, 더 행복한 인간을 창출해내겠다는 점은 아무튼 몇몇 사람들 의 의식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존속했던 것이다. 물론 호네커의 동독에서도 특정한 인간적 가치들은 말로만 약속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도 추구되었다. 노동자운동의 위대한 전통은 완전히 몰락하지는 않았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간에는 명백히 구분선이 그어질 수 있다. 사회주의가 민주주의와 차별을 고하고 그 자리에 짐짓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구축했을 때, 그것은 분명 사회민주주의와 차별을 고한 셈이었다. 그렇다고 다수의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가 하나의 그릇된 이념이고 또 현재도 그러하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사회주의가 민주주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맹신한 오만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다. 자유 없는 평등의 구호를 공산주의자들은 읊을 줄만 알았지,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성할 줄 몰랐던 것이다. 즉 그들에게는 민주주의가 배제된 사회주의가 목표였던 것이다.

반면에 본질적으로 인종주의였던 나치즘은 파시즘과는 달리 —— 나치즘과 파시즘을 동일시하는 것도 또 하나의 잘못된 동일시이다 —— 극도로 비열한 저급한 비인간성 바로 그것이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분명 —— 레닌까지도 —— 한동안은 지성의 수준에 있어서 아돌프 히틀러나 그의 추종자들 모두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물론 그릇된 것이긴 하지만,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경제학적 이론의 건축물인 반면, 히틀러의 『나의 투쟁』은 그런 측에 끼기는 커녕 일종의 국가적 범죄의 지침서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20세기는 어쩌면 이 두 사회적 정치적 운동들로 얼룩진 일종의 투쟁의 장이었는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확실히 그 두 운동들이 서로 제약적이었다는 사실이다. 히틀러는 바로 反복세비즘으로써 그토록 성공을 거둘 수 있었고 스탈린 역시 反파시즘이란 수단을 통해서 보다 더 확고히 자신의 정당성을 확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들이 이념사적으로 결코 동일시될 수 없음은 바로 비교의 작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 두 체제의 회생자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그 두 사상이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회생자들의 위계를 설정하는 일은 금물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동일시를 부추기는 부분별한 구호일 따름이다. 차이점을 강조하는 자는 필경 회생자들의 위계를 결정하기 보다는 역시 역사적 사건들의 등급을 매길 것이다. 바로 그러한 작업도 역시 비판적 역사상에 속하는 것이다.

역사상은 문화의 신분증명서이다. “역사는 한 문화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 정신적 형식이다”라고 후이징가(Johan Huizinga; 1872-1945; 네덜란드의 문화사가, 후기 중세사)는 설파한 적이 있다. 만약 통일독일이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사상을 그대로 지난 채 21세기로 진입한다면 그것은 극히 부정적인 형식이 될 것이다.

역사상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정치적 행위를 규정하게 된다. 자신의 역사상이 자유운동으로 각인되어 있었던 점은 서방의 위대한 국가들에게는 이익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독일인들에게는 사정이 그러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독일인들이 20세기를 되돌아보면서 자신을 이중적 독재의 회생으로 간주하게 된다면 그것은 문화의 한 손실이 될 것이다.

히틀러는 독일에서 권력을 장악했지만 울브리히트는 모스크바로부터 타의에 의해서 날아왔다. 한 사람은 자국 내에서 적지 않은 인기에 의존했지만 다른 사람은 외국 주둔군의 총칼에 의지했던 셈이다. 울브리히트는 이미 1953년 노동자들의 반대에 봉착했었지만 히틀러는 그런 적이 없었다. 민중은 울브리히트로부터 등을 돌렸고 그래서 그는 장벽을 구축함으로써 그들의 도주를 막을 수 있었지만, 끝내 민중은 호네커와 그의 동료들까지도 몰락시킨 것이다. 하지만 히틀러는 장벽이 필요없었다. 민중은 총통이 명하는 대로 그를 따랐다. 그가 결국 외부세력에 의해서 몰락했을 때 독일인들은 붕괴라는 말을 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로써 자신들의 꿈과 희망도 함께 파괴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근지하여 예컨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냉철한 시국관을 종결짓고 있다. “동독의 과거에 대한 청산작업을 탈나치화의 표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많은 것을 획일화하는 볼지각한 행위이다. 그러나 만약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또 그런 양상을 중단 시킬 수 없나면, 오이겐 코곤이 1947년 당시 정치적 과오에 대한 권리를 요구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의 뜻은 이러하다. 단지 착각을 했을 뿐이고 그밖에는 잘못에 대한 책임이 없었던 자는 박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오직 물어야 할 일은 과거에

나치였던자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그가 아직도 여전히 나치인가의 여부이다. 정치적 과오를 저지를 수 있는 권리가 용납된다면 정치적 낙관주의에 대한 권리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입신출세하기 위해서 한 정당에 들어가는 일 자체는 결코 면벌을 일이 아니다. 동독에서 살았던 자는 별달리 다른 선택권이 없었던 것이다. 그 사람들의 낙관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서독사람들의 낙관주의보다도 더 비난받아야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서독인들이 동독인들보다도 더 나은 민주주의자들이었던 말인가? 서독인들은 저항한 적이 있었던가? 그들은 동독인들처럼 나치시대에는 시대에 적응하지 않았고 또 열광적으로 나치를 추종하지 않았단 말인가? 이처럼 우리들은 우리의 이러한 이중적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의 민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상을 극명한 비교를 통해서 분화시키게 될 때 비로소 엄숙하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통일은 우리들을 50년대의 수준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우리 앞에는 다시 한번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있는 셈이다.”<sup>22</sup>

#### IV. 외적 통일과 내적 분단 – “동독은 우리의 내면에 살아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슈타지의 비밀문서의 존재가 알려진 다음부터 동독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겨온 점은 슈타지가 자기들의 행동을 어디까지 조사했을까 하는 호기심이었다. 특히 그중에서도 호네커 정권 하에서 여러 가지로 박해를 받아온 사람들이 그 문제에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한 기회는 결국 1992년 1월1일을 기해 최소한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악명높은 동독의 비밀경찰 슈타지가 ‘위험인물’들에 대해 조사해둔 비밀정보첩이 그날부터 이해관계자들에게 열람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40여년 동안 슈타지가 조사하여 보관해둔 요주의 인물들(약 6백만명)에 대한 개인조사첩이 부분적으로나마 소거되지 않은 채 남아서 공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동독 전체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로서 미성년자를 제외한다면 동독의 모든 성인이 조사대상이 됐다고 볼 수 있다. 보도에 의하면 슈타지의 문서보관 베를린센터에는 첫날부터 무려 3천명에 달하는 문서열람 신청이 쇄도했다고 한다. 베를린을 비롯하여 라이프치히, 켐니츠 등 지방문서보관소에도 열람신청자는 수천명에 이르렀는데, 우선 베를린센터에서는 동독치하의 저명한 민권운동가 9명에게 최초의 열람기회가 주어지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날 동독정부의 한 고위관직에 있었던 에펠만 여사는 가령으로 뒤 40명의 밀고자가 자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슈타지에 보고해온 사실을 확인했고 밀고자 가운데는 자기가 잘 아는 친지도 한 사람 끼어 있었다고 실토했다. 또 베라 볼렌베르거 의원(여)은 몇주 전에 그녀 남편이 슈타지의 정보원으로 일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슈타지 문서를 보고자 하는 사람은 전혀 예상못했던 놀라운 사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sup>22</sup> 같은 뜻.

을 염두에 두고, 열람을 신청하기 전에 이에 대해 재삼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충고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한 민권운동가는 자기에 관한 정보는 절반이 ‘소설’이었다고 내용의 허구성을 비판하면서 문서열람이 과거에 대한 의문에 해답을 제시해주는 점도 있지만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여 인간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점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과거청산에 진지하게 임하려는 자세와는 대조적으로 지난날 스스로 박해받았던 동독의 반체제인사를 중에는 옛 정권의 책임있는 간부를 옹호함으로써 공산주의 박해를 상징하는 메카시적 악봉을 다시금 불러내는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sup>23</sup> 말하자면 서독의 문화부 기자들이 간신히 발각된 한 슈타지-밀고자를 변호하는 논전을 신문잡지의 문화오락면이나 라디오와 TV채널에서 펼치는 과정에서 심지어 그 사람의 회생자들을 음모를 일삼는 모함자라고 몰아부치고 질타까지 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전환기 아래로 녹일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이 자신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서독의 작가 군터 그라스(Günter Grass)는 동독의 반체제자 볼프 비어만(Wolf Biermann)을 “종교재판의 재판관”이요 “지난 날 슈타지-체제의 형리”라고 몰아부치기도 했다. 그 근거는 비어만이 구동독의 지하시인이었던 알렉산더 안더존(=“자샤 Sascha”)을 슈타지-밀고자라고 공개적으로 매도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날 체제비판적인 동독의 문인 슈테판 하임은 서독인들이 치명적인 명예훼손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농독인들로부터 그들의 주도상을 빼앗아갈 뿐만아니라 또한 그들의 아이덴티티와 저항의 용기까지도 그들로부터 앗아가려 하고 있다고 분노하기조차 했다. 그러면서 그는 심지어 슈타지에게 밀고하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음으로써 SED-정권의 소문난 농조자였던 베를린 흄볼트대학 총장 하인리히 핑크와 연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처럼 녹일에서는 비록 통일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일치의 갈등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뒤틀린 세계의 모습 그대로 인지도 모른다. 슈타지의 회생자들이 범죄자들을 범죄자라고 칭했다하여 매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현실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 구동독을 방어하기 위해서 유토피아주의자들과 호도가들과 정치적 순진파들의 기이한 연합전선이 형성된 셈이다.

핑크와 안더존의 사안은 독일사회가 아직도 자신의 진정한 통일과는 멀리 떨어져 있으며 또 특히 동독쪽의 사람들이 여태껏 얼마나 엉성하게 자신들의 과거를 청산하는 작업에 임했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케이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심지어 통찰력을 잊은 듯한 인상을 주기조차 했다. 해직당한 핑크 교수를 위한 연대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한 집회에서 철학자 루돌프 바로(Rudolf Bahro)가 한 말이 이를 예증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동독적인 것’을 스스로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일이다.” 더구나 이 표현은 곧바로 동독이 어떠했는지 그 실상을 체험을 통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말이라는 데서 우리는 또한 아연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바로는 1977년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 서독에서 — 발표하는 자유를 택했다 하여 악명높은 바우첸 감옥에서 1년 이상의 옥고를 치른 사람이기 때문이

<sup>23</sup> Der Spiegel, 50/1991, S.18f.참조.

다. 그는 실제로 SED와 청산을 단행했기 때문에 8년의 감옥살이를 해야할 처지였으나, 운 좋게 16개월만에 서독으로 추방당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처구니 없게도 그 핵심에 있어서 평크와 안더존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기이한 연대를 결속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표현해주고 있는 셈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기만인 동시에 새로운 사회건설의 파산선고이기도 한 좋았던 옛 SED의 시절을 새삼스럽게 동경하는 것에 다름아니며 또한 슈테판 하임이 주문을 외었던 바 결코 존재한 적이 없는 농독-독일인의 ‘정체성’에 대한 동경 바로 그것이기도 하다.

바로를 비롯해서 하임과 크리스타 불프에 이르는 동독의 지식인들이 너무도 명백하게 망각하고 있는 점은 지난 40여년 동안 일당 독재에 의해 교묘히 연출된 영속적인 억압과 일상적인 금치산 선고를 통해서 옛 동독주민들의 자아발견과 자아실현이 계속적으로 저지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자기자신을 펼칠 수 있도록 허용되었던 신분은 단지 소수의 특권층에 한정되었는데, 거기에는 누구보다도 체제순응적인 예술가와 지식인들이 속했던 것이다. 그러나 어찌보면 지난 80년대 초 동베를린 저항운동의 주인공으로 평가되기도 했던 자사 안더존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역시 그 회생자로 각주될 수도 있다. 말하자면 슈타지의 심리적 억압에 대항해서 현실사회주의적 비민주국가로부터의 독립성에 대한 요구를 관철시키기에는 스스로 너무나 나약했던 한 가련한 인물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비열한 짓으로 밖에 다르게는 볼 수 없는 그 많은 파렴치한 행동들을 두고서 실제로 슈타지에 협조한다는 문서상의 서약같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이런 관점에서 동독의 작가와 지식인들이 평크와 안더존에게 연대감을 표시한 상황은 지난날 동독의 정신적 엘리트들 속에 내재하는 현저한 약점을 은폐시키는 일에 다름아닐 것이다. 또 그것은 동시에 이 엘리트들이 지금까지 부당한 정권과 스스로 연루된 것을 재정리하는 작업을 게을리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1989년 가을의 무혈혁명에 예술가와 지식인들은 사뭇 주저하면서 나중에서야 참여하였고 또 대학차원에서의 대학생들이나 교수들은 전혀 참여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이는 자유진영에서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현상임에 틀림없다. 서방으로 추방되었던 극소수의 용감했던 반체제 인사들의 대열로부터 문제의 그 두 사람에게 가해진 공격은 이제 그 부류의 지식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과거와 대결하는 일을 멀리 지연시키게 하고 또 그에 대해 월가월부하는 대신에 서방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항해서 서로 간에 결속을 다지게 하는 구실을 주고 있는 것이다. 敵은 지금도 여전히 서쪽에 있고 어제의 세계상은 다시 정상을 되찾고 있는 아이러니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평크와 안더존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동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눈사태는 1992년 1월1일부로 슈타지-문서법이 발효하게 되자 더 심해져서 이제는 불똥이 브란덴부르크 주의 수반인 만프레드 슈톨페(Manfred Stolpe)에게도 비화되기에 이르렀다. 슈타지와 사회가 서로 뒤엉켜있는 사실에 관한 자료가 백일하에 드러남으로써 독일에서의 내적 화해는 어쩌면 시지푸스적 작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청산

작업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바이체커 대통령을 비롯한 분별력 있는 많은 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아무튼 우리는 독일의 통합화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언제가 우리에게도 닥치게 될 그날을 위한 면밀한 시나리오를 다각적으로 미리부터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독일문학 Dogilmunkak』, 제45집, 1990.

『독일학 Deutschlandforschung』, 제1집, 1992.

『뷔히너와 현대문학 Büchner und moderne Literatur』, 제4호, 1991.

*Der Spiegel*, 37/1991, 48/1991, 50/1991, 52/1991.

*Die Zeit*, 23/1990.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FAZ), 2.Juni 1990.

*Kulturchronik*, 5/1991.

Emmerich, W.

1989<sup>2</sup> *Kleine Literaturgeschichte der DDR*, Darmstadt/Neuwied.

Hohendahl, P.U./Herminghouse, P.

1976 *Literatur und Literaturtheorie in der DDR*, Frankfurt/M.

Kil, Wolfgang

“Verkauft doch Brecht nach Yokohama”, in: *freitag*, 22. 3. 1991.

Köhler-Hausmann, R.

1984 *Literaturbetrieb in der DDR. Schriftsteller und Literaturinstanzen*, Stuttgart.

Langenbucher, W.R./Rytlewski, R./Weyergraf, B.(Hg.)

1983 *Kulturpolitisches Wörterbuch. Bundesrepublik Deutschland/DDR im Vergleich*, Stuttgart.

Liersch, Werner

“Was interessiert”, in: *ndl* 10/90.

Müller, Heiner

“Was wird aus dem größeren Deutschland?”, in: *Sinn und Form* 4/94.

Schmitt, H.-J.(Hg.)

1983 *Die Literatur der DDR*(=Hansers Sozial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Bd.11), München/Wien.

Steinberg, Isaak

1981<sup>2</sup> *Gewalt und Terror in der Revolution*. Nachdruck, Berlin(Karin Kramer Verlag)

Wolf, Christa

“Wo ist euer Lächeln geblieben?”, in: *du. Die Zeitschrift der Kultur* 7/91(“Brachland Deutschland”).

## Unterschiedliche Vorstellungen über die deutsche Wiedervereinigung und Vergangenheitsbewältigung

Tschang-Un Hur

Diese Abhandlung versucht im Rahmen einer gemeinsamen Studie über Wiedervereinigungsprobleme und Überwindungsaufgabe der Entfremdungen der geteilten Länder eine spezifische Problematik darzustellen, welche Auswirkungen das unterschiedliche Demokratieverständnis der Intellektuellen im deutschen Wiedervereinigungsprozeß zur Folge hat und wie vernünftig die Aufgabe der doppelten deutschen Vergangenheit bewältigt werden kann.

Dabei wird sich herausstellen, auf welche Problemen die aktuelle Auseinandersetzung mit reformsozialistisch gesinnten DDR-Intellektuellen stoßen wird, obwohl sich die Wiedervereinigung in der deutschen Geschichte überhaupt als eine einmalige Revolution ohne Blutvergießen' charakterisieren lässt. Die repräsentativen DDR-Schriftsteller der älteren Generation wie zum Beispiel Heiner Müller, Volker Braun wollen dieses Geschehen jedoch nicht als Befreiung, sondern als Kolonialisierung des Kapitalismus verstehen. Deswegen wird hier eingehend diskutiert, warum sie die Wiedervereinigung so sehen und wo Streitpunkte in der Auseinandersetzung mit dem Westen eigentlich liegen. Daraus erklärt sich, wie der Vorgang der Wiedervereinigung von DDR-Intellektuellen historisch gedeutet wird. Und im Blick auf die Gewaltfrage wird auch deren Demokratieverständnis erörtert.

In dieser Arbeit geht es im Grunde genommen darum, Komplexe herauszuarbeiten, die zwischen Ost und West kontrovers sind und die das gegenseitige Verständnis behindern. Darüber hinaus wird im Zusammenhang mit der unterschiedlichen Vorstellungen über die eigene unglückliche Vergangenheit konstatiert, daß der Sozialdemokratismus sich in der historischen Auseinandersetzung mit dem Kommunismus schließlich durchgesetzt hat. Darin liegt eben die Zukunft der wiedervereinigten Bundesrepublik Deutschlands trotz aller momentanen Schwierigkeiten garantiert.

허창운, 서울대 드문과 교수  
Tel: 880-6142(O), 568-6839(H)